

“함께 살자 한국 사회, 모든 해고 금지하라”

금속노조, 코로나 19 침묵 깨고 투쟁 지지개 ... 20일, 재벌 하수인 경총 해체 촉구 결의대회 열어



금속노조가 “경총 해체 투쟁”을 선언하며, 코로나 19 위기로 강요당한 기나긴 침묵을 깬다.

금속노조는 4월 20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에서 ‘민생파탄 주범, 재벌의 하수인, 경총 해체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의 각 지부는 4월 말까지 지방 경총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이어간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를 해고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권고사직, 희망퇴직, 무급휴직이 덮친 현장의 피눈물 나는 사연이 쏟아지고 있다”라며 “집회를 자제하고 코로나 19가 물러서길 바랐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다. 노동조합이 물러서면 낭떠러지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지금 어느 때보다 ‘함께 살자’라는 구호를 진심으로 외치고 싶다”라며, “금속노동자가 민중과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넘을 준비와 계획을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

오승택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대회투쟁사를 통해 공단에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오승택 수석부지회장은 “서울남부의 공단에 설립한 한 노동조합이 첫 교섭을 시작했는데, 경총 소속의 노무사가 교섭에 나와 아

연실색했다”라며 실상을 전했다.

오승택 수석은 “현재 지회에 설립한 신규 분회 교섭에서 사측이 노조 불인정→폐업 협박→일방휴업을 들고나오면,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승택 수석은 “공단에서 노조할 권리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며 “노조파괴 일선에 경총이 있다. 자본의 뒷배 경총 해체가 가장 시급하다”라며 경총 해체 투쟁을 호소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산재 사망 고리 단절 ▲노조할 권리, 투쟁할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 쟁취 ▲산별노조로서 노동자 서민의 삶 수호 등을 결의했다.

노조 중앙위,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계획안 등 승인

대규모 구조조정, 노동법 개악 도발 예상 ... “비상한 각오와 태세로 위기를 기회로 조직”

금속노조가 중앙위원회를 열고 11기 1년 차 사업계획과 2020년 투쟁방침을 사전 승인했다. 노조는 중앙위원회가 승인한 사업계획을 우선 집행하고 52차 임시대의원대회 열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노조는 토론이 불가능한 모바일 투표방식의 한계로 지난 51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사업 계획 등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4월 20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3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노조는 지난 2월 13일 132차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 올해 사업계획과 투쟁방침을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변화한 정세에 맞춰 추가·보완해 안건을 상정했다.

노조는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사업계획과 투쟁방침을 수정했다. 노조는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자본과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며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는 자본이 고통 분담 논리로 ‘임금 삭감과 복지 축소, 임금체계 개악’ 등을 밀어붙이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를 단단히 다질 거로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4.15총선 승리를 계기로 친재벌 행보를 확대하면서, 민주노총 등 노동진영에 임금과 노동시간, 쟁의권 양보를 압박할 거로 전망했다.

노조는 코로나 위기 국면을 틈탄 자본의 총공세를 노동운동이 한국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비상한 각오와 태세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동이 안전하고 민중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해고 금지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재벌 체제 개혁 등을 주요 요구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와 지부 운영위원회를 즉시 비상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노조할 권리 쟁취 ▲사회연대전선 구축 ▲위기 대응 산별 협약 쟁취 등을 목표로 투쟁한다.

이와 함께 산별노조 미래 전망 마련을 위해 ▲전 조직적인 조직확대 사업 ▲지역 중심 조직강화와 재정 혁신 ▲교육연수원 개원에 맞춘 산별 교육 시스템 구축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반전·평화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조는 2020년 산별교섭 투쟁 기조로 ▲저성장 국면과 4.0 기술발전 등 산업 재편에 대응, 금속노조 산업정책 수립과 전 조직적 투쟁 강화, 조합원 고용안정 집중 ▲노조파괴 대응, 노조할 권리 확대, 임금동결·복지축소·이중임

금제·탄력근로제 저지, 생활임금 쟁취와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집중 ▲재벌체제 개혁과 고용안정 산별 체제 전진을 위해 18만이 함께하는 투쟁 실천 등을 내걸었다.

노조는 2020년 임·단협 18만 통일요구로 ▲산업구조조정 대응 고용안정 보장 ▲노조파괴 대응 노동 3권 보

장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등을 추가했다.

산업구조조정 시기 고용안정을 위해 제안한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와 고용안정 기금 구성 요구안은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삭제했다.

노조 중앙위는 노조파괴에 대응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노동쟁의 원칙, 쟁의 중 시설 이용, 노동쟁의와 신분보장, 신규채용과 대체 근무 금지, 불이행 책임’ 등을 요구안으로 정했다.

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1만 원을 요구한다. 지부별 공동요구는 기본급 월 120,304원 인상과 지역 내 주요 현안 해결 등이다.

중앙위원들은 52차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을 확정하고 개최 시기와 장소 결정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했다.

중앙위원회는 이밖에 ▲투쟁기금 사용 승인 건 ▲신분 보장기금 지급 승인 건 ▲조합비 정액 납부 사업장 승인 건 ▲조합 자산 폐기 승인 건 ▲인더스트리올(국제제조노련) 감사 출마 승인 건 ▲징계위원 선임 건 등을 승인했다.

민주노총, ‘해고금지 비상대책본부’로 전환

“총고용 보장·사회안전망 전면확대·사회 공공성 강화 쟁취” ... 노정·노사정 비상교섭도 제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이 4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 열어 ‘코로나 19 경제 위기 대응 상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중앙집행위원회를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비상대책본부’로 전환했다.

민주노총은 상반기 사업 핵심 기조를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위기 대응을 전면화한다’로 정하고, 4대 핵심 의제로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사회 공공성 강화 등을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실천계획으로 5월 1일 노동절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6월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 임원들은 4월 말부터 실

천과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현장순회에 나서며, 코로나 19 피해사업장도 돌아볼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해고금지·총고용 보장 투쟁을 사회연대투쟁으로 확산하기 위해 4월 28일 500개 이상 범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비상연대체’ 발족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은 ‘해고금지 범국민 촛불행동’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4대 핵심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노정 또는 노사정 비상교섭(협의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월 17일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금융지원 목적 1순위 노동자 고용유지 ▲금융지원액 80% 이상 고용유지 사용 ▲금융지원 원천, 하청·아웃소싱·도급 고용

유지 의무 등 요구안을 전달한다. 4월 18일 국무총리 면담도 잡혀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4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 협의’를 제안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비상한 시기에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해고를 금지할 방안을 협의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산업별 비상 협의체’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도 혜택을 보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제안하며, “‘전국민고용보험제’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보험료 인상 등 실현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